

미래형 변전소로 지역 랜드마크 추진 공원·문화시설 등 주민친화형 조성

한전, 복합변전소 청사진 제시
외관 개선·친환경 전력설비 도입
전자파 우려 등 부정적 이미지 개선
김동철 사장 “민원·갈등 최소화”

한국전력이 향후 변전소를 건설할 때 사옥과 변전소 기능을 통합한 복합 변전소로 건설하기로 했다. 변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한전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미래형 변전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지금까지는 변전소와 사옥을 개별 건설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옥과 변전소 기능을 통합한 복합변전소(가칭)로 건설하고, 미관을 개선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 설비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신뢰를 강화해 전력망 적기 확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전은 “변전소에 한전 직원이 상시 근무하게 되면 설비운영 효율성 제고,



전남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자리잡은 한국전력 사옥. /뉴시스

전자파 불안감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지역의 주요 원인인 변전소 건설 반대 민원에도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전소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변전소 부지 내에 공원,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을 필수 확보한 주민친화형 변전소

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전소는 단순히 에너지 공급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공존하는 일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변전소가 미관을 해친다며 건설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독특한 조형미로 주목받는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변전소가 곧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특히, 인구가 많고 홍보효과가 큰 지역부터 랜드마크형 변전소 모델을 우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변전소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이제는 변전소를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전은 변전소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전 본연의 업무인 전력망 적기 건설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올해 외국인투자 330억 달러 ‘역대 최대’

산업부, ‘외국인투자전략회의’ 개최

올해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만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안덕근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 의집에서 주한외국상,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함께 올해 들어 4번째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외국인투자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 330억 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해 역대최대였던 작년 연간실적(327.1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140.1억달러, +29.3%)가, 투자유형별로는 생산·고용 기여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계엄 이후 첫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255.7억달러, +17.5%)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60.6억달러, +471.7%)·중국(55.4억달러, +277.3%) 발 투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62.3억달러, -32.9%)·미국(45.7억달러, -23.5%)발 투자는 감소했다.

안 장관은 “특히 첨단산업 및 소부장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은 생산 및 고용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인수·합병 투자보다 많았고, 서비스분야보다 제조업분야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해 국내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 절반 줄인다

정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2030년까지 50% 이하 감축 목표
기술개발에 3년간 25조 이상 투입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은 올해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 품목의 국

내생산을 지원하는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급망 위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 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통·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한다.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500억원 수준을 장기·지속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그간 소관부처별 추진해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안보 품목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했다.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는 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 강화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재장애인 취업지원 위한 공공기관 협력

근로복지공단,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일 산재장애인의 취업지원과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약 400여명 이상 중증 산재장애인이 민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 중심 교육 운영으로 자격 취득이 어렵고, 취업에서도 소외되어 산재장애인에게 특화된 전문과정 개설 요구가 많았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가진 고유영역의 전문성으로 산재장애인의 자격 취득과 양질의 일자리 알선에 집중함으로써 직업 복귀와 사회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재장애인을 선발하여 훈련기간 동안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한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실무중심 교육과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 5개 지역에서 실내건축, 소방설비, 사무자동화 등 취업수요가 높은 장애인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의무고용사업장과 연계해 양질의 취업을 알선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장애인의 건강한 직업 복귀를 위한 공공기관 협업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건축 제한 ‘불합리’

권익위, ‘보호지구 완화’ 권고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했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층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 대해,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권익위는 해당 구역의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35년간 연안 평균 해수면 10.7cm 상승

해수부, ‘연안 해수면 높이 관측’
평균 해수면 매년 3.06mm씩 높아져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지난 35년간 10.7cm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다. 게다가 기후변화 탓에 최근 10년 사이 해수면 높이는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19일 발표한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높이 관측자료에 따르면 지난 35년(1989~2023년) 동안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6mm씩 높아져 총 10.7

cm가량 상승했다.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과거 30년 이상 관측자료가 축적된 우리나라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수집 자료를 분석해, 2009년부터 매년 해수면 상승 속도를 산정해 발표해 왔다.

올해 조사원에서 발표한 최근 35년간 상승 속도(연 3.06mm)는 작년에 발표한 34년간 평균 상승 속도(연 3.03mm)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이 연 3.46mm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서해안(연 3.20mm), 남해안(연 2.74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 지점별로 보면 경북 울릉이 연 5.11mm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포항, 전북 군산, 충남 보령, 강원 속초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수면이 과거 10년간(2004~2013년) 약 2.8cm 상승(연 2.79mm)한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약 3.9cm(연 3.88mm) 올라, 같은 기간 대비 최근 10년간 1.1cm가량 더 많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의 높이가 최근 10년 새 더 빠르게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